



보도 일시	2022. 8. 18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8. 18.(목) 10:00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 유창연 (044-215-8590)
		담당자	사무관 김상규 (kimgsg39@korea.kr)

'22.2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

- 2/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+12.7% 증가하며 통계 발표 이후 ('06년) 최대 증가폭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9% 증가
 - 고용 및 자영업자 수 증가,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주요 시장소득(근로·사업소득) 증가, 2차 추경 등으로 이전소득도 크게 증가
 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288.7<+5.3%> (사업)92.7<+14.9%> (이전)89.3<+44.9%>
 -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1분위 가구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(+16.5%)
 - 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2.7 **(1분위)+16.5** (2)+13.1 (3)+11.7 (4)+14.4 (5)+11.7
- 소비지출이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(+5.8%)하였으나, 처분가능 소득의 증가폭(+14.2%)이 더 커 흑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(+35.2%)
 - 적자가구 비율도 1·2분위를 포함하여 전년 동기대비 감소(△1.6%p)
 - 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 - ※ 적자가구 :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- 소득 5분위배율은 5.60배로 전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(+0.01배p)
 - ※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'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2/4)5.03 ('21.2/4)5.59 **(22.2/4)5.60**

◇ 전반적인 고용 및 업황 개선세, 소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·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
 → 소득·분배여건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을 통한 저소득층 부담 완화,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
 -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

전체 가구소득

-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.1만원, 전년 동기대비 +12.7% 증가
 -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+6.9% 증가
- (소득항목별)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전년 동기대비 증가
 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288.7<+5.3%> (사업)92.7<+14.9%> (이전)89.3<+44.9%>
 - (근로소득) 고용 증가¹ 및 임금 상승² 등 영향으로 증가
 - 1) 취업자(전년 동기대비, 만명): ('21.2/4)61.8 (3/4)57.7 (4/4)66.0 ('22.1/4)100.1 **(2/4)88.0**
 - 2)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(전년 동기대비, %): ('21.2/4)4.0 (3/4)5.0 (4/4)5.2 ('22.1/4)7.2 **(4~5월)3.9**
 - (사업소득) 자영업자 수 증가¹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² 등 영향으로 증가
 - 1) 자영업자(전년 동기대비, 만명): ('21.2/4)△0.8 (3/4)△0.5 (4/4)4.8 ('22.1/4)10.3 **(2/4)9.8**
 - 2) 서비스업생산지수(전년 동기대비, %): ('21.2/4)5.7 (3/4)3.9 (4/4)5.5 ('22.1/4)4.1 **(2/4)5.4**
 - (공적이전소득) 사회안전망 강화¹, 2차 추경 집행² 등 영향으로 증가(+61.5%)
 - 1)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,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인상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생계) 등(1월~)
 - 2)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21.1조), 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.2조), 긴급생활지원금(0.8조) 등 지급

분위별 소득

-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이 큰 폭 증가
 - 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2.7 **(1분위)+16.5** (2)+13.1 (3)+11.7 (4)+14.4 (5)+11.7
 - (1분위) 사업소득은 감소(△19.6%)하였으나, 근로소득(+47.3%) 및 이전소득(+12.7%) 증가로 총소득 큰 폭 개선(+16.5%)
 - 임시직 취업자 증가세* 등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, 공적연금 및 사회수혜금 확대 등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(+14.2%)
 - * 임시직(전년 동기대비, 만명): ('21.2/4)34.9 (3/4)33.5 (4/4)14.8 ('22.1/4)29.5 **(2/4)2.5**

- (5분위) 근로소득은 감소($\Delta 4.7\%$)하였으나, 사업소득(+40.5%)과 이전소득(+108.4%) 증가로 총소득 큰 폭 개선(+11.7%)
-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집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(+165.4%)하였으며, 자영업자 증가*·업황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
- * 고용有 취업자(전년 동기대비, 만명): ('21.2/4) $\Delta 7.2$ (3/4) $\Delta 6.0$ (4/4)0.7 ('22.1/4)4.3 **(2/4)7.5**

지출 · 가계수지

- (처분가능소득) 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(+14.2%)
 - 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(조세, 연금지출, 사회보험료 등)
 - *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(%): (1분위)+15.7 (2)+13.1 (3)+11.0 (4)+14.7 (5)+15.3
-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.9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+5.8% 증가(실질 +0.4%)
 -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대면활동 관련 지출은 증가¹⁾ 하였으나, 고물가로 인해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식료품, 주류 등 지출은 감소²⁾
 - 1) 지출 증감률(전년 동기대비, %, 명목/실질) : (오락·문화)+19.8/+16.8 (음식·숙박)+17.0/+9.2
 - 2) 지출 증감률(전년 동기대비, %, 명목/실질) : (가사) $\Delta 9.4/\Delta 14.3$ (식료품) $\Delta 1.8/\Delta 7.1$ (주류) $\Delta 3.0/\Delta 5.3$
- (가계수지) 흑자액은 132.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.2% 증가하였고, 평균소비성향은 66.4%로 전년 동기대비 $\Delta 5.2\%p$ 하락
 - ※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 / 처분가능소득)×100
 - 소득 증가로 적자가구 비율은 22.8%로 전년 동기대비 $\Delta 1.6\%p$ 하락
 - ※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 - *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(%): (1분위)53.7 (2)20.6 (3)18.5 (4)14.9 (5)6.1

소득분배

-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60배로 전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(+0.01배p)
 - 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2/4)5.03 ('21.2/4)5.59 **(22.2/4)5.60**

- ① '22.2/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+12.7% 증가하며 통계 발표 이후 ('06년) 최대 증가폭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9% 증가
-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1분위 가구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(+16.5%)
 - 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2.7 **(1분위)+16.5** (2)+13.1 (3)+11.7 (4)+14.4 (5)+11.7
 - 물가 상승세 지속*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9% 증가
 - * 물가상승률(전년 동월비, %): (1월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 5.4 (6) 6.0 **(7) 6.3**
- ② 고용 및 자영업자 수 증가,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장 소득(근로·사업소득) 증가,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이전소득도 크게 증가
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288.7<+5.3%> (사업)92.7<+14.9%> (이전)89.3<+44.9%>
 - 상용직을 비롯한 취업자 증가(+88.0만명) 등으로 근로소득 상승, 자영업자 증가(+7.5만명)·서비스업 업황 개선(+5.4%) 등으로 사업소득도 상승
 -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2분기 약 21조원 지급) 등 2차 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지며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(+61.5%)
- ③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·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(+5.8%)하였으나, 처분가능소득의 증가폭(+14.2%)이 더 커 흑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(+35.2%)
- 적자가구 비율도 1·2분위를 포함하여 전년 동기대비 감소(Δ 1.6%p)
 - *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(%): **(1분위)53.7** (2)20.6 (3)18.5 (4)14.9 (5)6.1
- ④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60배로 전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(+0.01배p)
- ※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'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2/4)5.03 ('21.2/4)5.59 **(22.2/4)5.60**

- 전반적인 고용 및 업황 개선세, 소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·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
 -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도 시급한 과제
-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·분배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①물가안정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, ②취약계층을 위한 고용·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속 노력할 계획
- ❶ 물가·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을 완화
 - 추석 민생대책(8.11일) 등 총 9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급물량 확대·할당 관세 적용 등의 물가안정 대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
 - * (공급확대) 주요 채소의 정부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등 물량을 활용한 시장 공급 확대 (할당관세) 소·돼지·닭고기·식용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및 도입물량 유통관리 강화
- ❷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·구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강화
 -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,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, 자활근로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고용·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2차 추경(5.29일) 등을 통해 마련한 긴급생활지원금·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지원사업들을 신속히 집행
- 또한,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서민·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
 - * 강우 직후 병해충 적기 방제, 배추·감자·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약제 할인(최대 50%), 영양제 지원 및 배추 예비묘 공급(150만 주) 등